

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05.01	↓ 코스닥	827.24
	(-30.28)		(-4.44)
↑ 금리 (국고채 9년)	3.587	↑ 환율 (원·달러)	1305.80
	(+0.004)		(+15.80)



자꾸 미뤄지는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인하’ 지적도

개혁 논의, 총선이후 탄력 예상
모수조정 등 상세 결정 못해
‘더 내고 더 받기-그대로 받기’
여야, 두가지 방향성 유력 검토

정치권 밖 “미래세대 부담 커
‘더 내고 덜 받기’도 고려해야”

국민연금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두 가지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기’의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국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에는 동의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조정을 비롯한 개혁안의 상세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총선이 최대 화두인 만큼 연금개혁은 총선 이후에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채택이 유력한 개혁안은 지난 16일 민간 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 제출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의 두 가지 안이다. 하지만 정치권 바깥에서는 ‘더 내고 덜 받기(보험료율 소폭 인상·소득대체율 인하)’라는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공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025명(가입

1957명, 수급 68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연금개혁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국민연금의 연금개혁 필요성에 동의(다소 동의 50.1%, 매우 동의 3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제도 개혁 방향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38%를 차지했다.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23.4%, ‘더 내고 지금만큼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21%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33.2%에 그쳐 ‘더 내고 더 받는다’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적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학회이 지난 3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설문에는 따르면 응답자(47명)의 84% (40명)는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9% (14명)로 가장 많았고,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15% (7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효과를 고려한 연금개혁 추진 필요’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이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안정 중심의 연금개혁



해군,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 성공

해군은 1일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국내 첫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감찬함(DDH-II)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향해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이 54.6% (2007년 20세~50세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를 기록해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목표한 50%를 상회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향후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재정문제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긴밀히 연계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장관 절반 바뀌나 내년 총선 앞두고 尹, 대폭 ‘물갈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에 이은 인사로, 중앙부처 19개 중 최대 10명 안팎의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한 윤 대통령으로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들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을 전후해 주요 인사들이 출마할 지역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을 전원 교체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4일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장관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 등이 언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에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선장 출신 해양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림부 장관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물망에 올랐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임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유지상 전 총장은 신설 예정인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후보에도 거론되고 있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거부된 ‘노란봉투법’... 노·사·정 갈등 일촉즉발

尹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노동계, 투쟁 예고 등 강경대응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에 돌아갔다. 경제계는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

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며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폐기 수준

경제계는 즉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을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조심스럽게 보면서, 국회에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에 이중 3분의 2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국회 298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37%에 달하는 111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중론이다.

◆노동계 강경 대응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서울청사와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명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



▲ 김기현 “야당 습관성 묻지마 탄핵·막가파식 특검... 국회 마비” /사진 뉴시스
▲ 여당 “송영길 비례정당 ‘마지막 발악’ 추악... 수사 협조하라”

▲ 민주 “국힘, 예산안·민생법안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 추미애 “김건희 특검 대상 확대해야...여, 국회 책무 저버린 공범”



▲ 한 총리 “국회, 국민 절박한 목소리 부응 예산·민생법안 처리해달라” /사진 뉴시스
▲ 민주 “이정섭 후임 안병수, 수사 무마·기밀유출 의혹”